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09)

□ 논의 배경

- 지난 9.28일 국무회의에서 ‘2010년도 예산안’을 심의·의결
-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 예정
- 농업계는 각종 농정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도 농업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늘려줄 것을 바라며 국회의 심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음.

□ 정부 편성 예산(안) 주요내용

표 1.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총괄

단위: 억원, %

구 분	'09예산 (A)	'10예산안 (B)	전년대비 증감	
			(B-A)	%
◆ 총지출(예산+기금)	146,363	146,434	71	0.0
◇ 예산 일반지출	97,277	95,985	△1,292	△1.3
◇ 기금 일반지출	49,086	50,449	1,363	2.8
I. 농림수산	141,970	142,045	75	0.1
□ 농업·농촌	123,240	121,795	△1,445	△1.2
○ 농업체질강화	24,950	23,681	△1,269	△5.1
○ 농가소득·경영안정	26,811	25,589	△1,222	△4.6
○ 농촌개발·복지증진	17,485	16,977	△508	△2.9
○ 양곡관리·농산물유통	32,354	32,478	124	0.4
○ 농업생산기반	21,640	23,070	1,430	6.6
□ 수산업·어촌	13,330	13,356	26	0.2
□ 식품업	4,719	5,652	933	19.8
□ 기타사업비	681	1,242	561	82.4
II. 기본적인경비	4,393	4,389	△4	△0.1

* 농촌진흥청(9,098억원) 및 산림청(1조 6,086억원)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 2,274억원

□ 논란 부분 (농업계 입장)¹⁾

○ 농업예산 규모

-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으로 올해 14조 9,909억원(추경 포함)보다 1,375억원 많은 15조 1,284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14조 6,434억원만 편성되어 실제로는 올해 집행된 예산보다 오히려 3,475억원(2.3%) 줄어든 셈임.
- 또한 농업분야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 등 높임사업 등 4대강사업 예산(4,566억원)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농업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짐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는 농업예산 규모를 최소한 국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(2.5%) 수준으로 늘려 줄 것을 희망

○ 농식품 전문투자펀드

- 농식품부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6,000억원(민간자본 50% 포함)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으로, 내년에 처음으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(모태펀드)에 6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함.
- 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)도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임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는 농업예산 600억원을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고, 펀드 운영·투자 방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
- 펀드의 혜택이 가족농보다는 기업농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
- 농업예산안 규모가 농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부터 3년간 3,000억원의 농업예산을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

1) 농업계 의견은 농민단체 등 의견을 농민신문에서 정리한 것을 발췌함.

지 않다는 의견임.

○ 시·군 유통회사와 품목별 대표조직

- 산지유통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6곳인 시·군 유통회사를 12곳으로 늘리기 위해, 올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79억2,000만원 책정
- 한편 농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함.

<농업계 의견>

- 올해 설립한 6개 유통회사의 매출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, 일부는 대표·이사·감사 등 임원의 비중이 50%를 넘어 관련 예산 대폭 증액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
- 올해 유통회사를 설립한 6개 시·군 가운데 5개 시·군에서는 이미 연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, 내년에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중인 9개 시·군 가운데 8개 시·군에도 연합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산지유통조직과의 상충이 예상됨.

○ 농어촌 복지

-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 1,707억원에서 1,594억원으로 113억원 삭감하고, 지원 대상도 49만9천 세대에서 46만3천 세대로 3만6천 세대 축소, 가사도우미 지원 예산 또한 11억원으로 2억원 삭감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인들은 소득 감소와 농어촌 고령화로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○ 4대강 사업

-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저수지 독 높임 사업비 4,066억원, 영산강 하구독 구조 개선 사업비 500억원 등 모두 4,566억원을 신규 편성함.

<농업계 의견>

- 농업계 관계자들은 “보수·보장이 시급한 노후 수리시설이 전체 수

리시설의 56%(3만8,500여개)에 이르는 데도 정부가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농업용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96개 저수지의 독을 높이려 한다”고 지적하며,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서 노후 수리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

○ 기타 농업계 의견

- 올해 20억3,000만원이었던 **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**가 내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음. 폐비닐로 인한 농지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만큼 깨끗한 농업환경 유지를 위해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바람임.
- 1,200억원으로 책정된 **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** 출연액을 대폭 증액시켜 기금의 건전성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임.
- **맞춤형비료 지원사업** 관련, 농촌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1,500억원 규모의 화학비료가격 보조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맞춤형비료 지원사업(내년 예산 631억원)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당분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.